

OECD 연구회 환경분과 제1차회의 결과보고

2003. 9

OECD연구회 환경분과
간사 : 정 영 근

□ 회의 개요

- 일 시: 2003년 9월 19일(금) 17:00
- 장 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 발표자: 최정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 주 제: 'OECD 산림환경통계 현황 및 분석'
- 참가자: 총 7 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영근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용하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 박사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임종수 교수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한택환 교수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김준순 교수

□ 발표 내용 (제출원고 참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경제활동을 연계시킨 정책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며, 또한 환경상태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동시에 평가하고 측정하며 이들의 상태변화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
 - 이 같은 연계 노력은 통계부문에서도 환경통계의 체계화된 생산과 보급이 요청되고 종합적인 통계자료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 후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림환경 항목을 포함하여 각종분야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의무사항은 없지만, 회원국이 제출한 통계항목들이 종합되어 상호비교를 통하여 각 국가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음
-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림환경통계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검

토하여 우리나라 산림조사 및 통계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OECD 통계자료는 회원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OECD 각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수집
- 대부분의 통계활동이 위원회 자체의 업무와 직결되기에 해당 국 혹은 기구 내의 전문가 등에 의해 활동 수행
 - OECD의 분야별 위원회 혹은 기구 중 10개 조직은 자체 통계 혹은 지표 관련 실무작업반을 운영
- OECD는 당초 고객인 정책입안자의 주문에 따라 정책결정에 관련되는 통계가 시기에 맞춰 제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활동을 각급 조직에 분산
 - 분산 통계시스템은 매우 실용적이고 바람직한 면 이외에 통계자원과 활동을 분산시켜 중복과 비효율을 조장할 가능성을 수반
- OECD는 모든 통계활동을 집중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경제통계 자료의 수집과 효율적인 통계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자 통계국을 신설
 - 그 결과로 위원회 중심의 통계활동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통계활동을 총괄하는 통계국을 갖게 되어 OECD의 통계조직은 반분산적(semidecentralized) 통계시스템 형태를 취함
 - OECD의 공식적인 통계조직은 통계활동의 구심점인 통계국과 각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내부에 설치한 통계 전담조직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중심은 통계국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제기구 통계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제의 일환으로 통계국은 1992년부터 OECD회원국 통계기관장 회의를 ECE 연차회의와 연계

시켜 개최

- 이 회의에서 통계기관장들은 OECD의 전반적 통계작업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회원국의 자료수집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논의
- OECD는 유엔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의 장려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일반 산업통계 수집과 배포에 관하여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업무를 분담
- OECD의 통계 산출물은 사무국 자체, 회원국 정부, OECD 일반대중으로 나누어지는 3가지 유형의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
 - 사무국은 경제 및 사회, 과학, 기술, 산업 등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서 정책권고안을 분석하고 작성하는데 통계를 필요로 함
 - 회원국 정부는 자국의 성과를 인접국 혹은 경쟁국의 성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를 필요로 함
 - OECD 일반대중은 일반 기업체, 대학교수 및 학생, 언론인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은 자국의 분야별 진전 상태를 폭넓은 국제적 배경에서 살펴보고자 OECD 통계를 사용
- 압력-반응에 입각한 환경통계 작성체계는 인간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작성영역을 인간활동 즉 인구성장·변화와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등의 경제활동 및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환경상태와 자연자원의 환경적 영향과 변화 그리고 환경과 자연자원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경제와 환경주체의 대응으로 구분
 -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고갈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활동으로 발생하고, 또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제약 내지 위협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시키려는 반응조치에 관한 일련의 과정임

- 2000년 OECD 환경통계 분야 총 1,944개 항목 중 현재 우리나라의 작성 항목은 467개 정도로 작성 비율은 약 24.0% 수준
 - 부문별로는 대기, 내수, 산림, 오염방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성되고 있는 편이고 토지, 소음, 해양, 폐기물 부문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소음과 해양부문은 기존의 작성체계와 조사항목이 전혀 달라서 작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 OECD 산림환경통계의 목적은 회원국들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 자료는 2년마다 각 회원국들의 산림환경통계 목록인 OECD 환경자료 요약집으로 출간하고, 환경지표(Environmental Indicators) 및 환경전망(Environmental Outlook)의 기본 자료로 활용
- OECD 산림환경통계 항목에 대한 설문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OECD 회원국에 배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1998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했으며, 2002년도의 산림분야 설문지는 OECD에서 작성되지 않았음
- 우리나라의 산림통계는 산림청 임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통계는 크게 산림면적과 축적 등을 나타내는 산림자원통계와 임업통계로 구분
 - 산림자원통계는 임업연구원에서 10년 주기로 산림면적 및 축적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를 기초로 산림에 관한 일반현황과 조림 및 육림 등 산림사업현황을 순환 조사하는 전국산림실태조사 결과로 생산되는 산림기본통계가 있으며, 임업통계는 다시 밤, 잣 등 임산물생산통계와 임업총조사, 임가경제조사 및 임업경영실태조사로 세분
- 기존의 자료나 행정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몇몇 OECD산림항목에 대해서는 산림관련부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면서 발전시

켜나가야 함

- OECD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의 산림환경통계항목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새로운 산림환경통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산림환경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산림환경통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법적 제도적 마련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각종 산림통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산림환경통계의 근간인 산림자원조사가 새롭게 개편되고, 조직 및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산림환경통계작성은 단지 보고서나 출판만을 위한 통계작성이 아니라 실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어 주기적으로 국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함

□ 토론 내용

- 현재 우리나라 OECD 기준 산림환경통계항목 작성에 가장 큰 문제점은 OECD 항목이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우리나라 산림환경통계는 예전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 되어있다는 것임
 - OECD는 목재생산림에 대하여 임상별, 수종별, 소유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항목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목재생산지로 구분된 항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이용별로만 산림을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지로 구분하였을 뿐 더 이상의 세분화는 되어 있지 않아 이들 항목에 대하여 기입이 전무한 실정임
- OECD 산림환경통계는 이론적으로 압박-반응의 방법에 입각하여 환경

에게 우리가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얼마의 댓가를 환경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라는 산림환경 계정에 입각한 이론 통계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통계체계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임

- OECD와 우리나라 산림관련용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OECD회원국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나 OECD선진국에서는 이미 산림관련 용어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량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의를 한 데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산림용어가 정성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집된 통계자료를 계량화하거나 상호비교를 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림항목의 정의를 참조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정량적 산림용어정립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OECD기준에 따라 항목별 용어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더욱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한 추정된 항목 값이 상당히 과대 또는 과소치를 가져올 수 있음
- OECD 산림환경통계항목은 경우에 따라서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되는데 시·군에서 작성되어지고 있는 사유림에 관련된 산림면적변동 사항, 벌채상황, 피해면적상황 등의 자료조사 및 수집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지침이 없고, 조사를 통한 통계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보고 통계의 성격으로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담당자의 잦은 업무이동과 통계직 기피현상 등으로 효율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현 시스템에서는 통계적 과오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지표개발이 기초단계에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국제기구의 산림통계체계를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목표

하에 산림환경통계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국제기구 기준에 입각하여 산림용어가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정립되어 실무자들이 혼동없이 정확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림환경통계체계를 구축하는데 산림분야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상호 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는 OECD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의 다양한 산림환경통계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을 도입하거나 통계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림통계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며 우선적으로 통계 전문 인력이 보장되어야 함
- 통계전문인력이 모든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통계작성의 기본 단위인 각 시·군 및 관리소에서 수시로 변동된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통계수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통계전문인력들은 산림관련기관, 산업체관련기관 및 일반국민에게까지 산림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Network를 설치하고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산림통계 요구항목을 작성하고 산림통계 프로그램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함
- 우리나라는 신속히 산림환경통계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환경통계위원회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 이 위원회를 통하여 UN통계국의 환경경제통합계정, OECD요구 산림환경통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지표 개발 등 여러 국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산림통계체계를 정립하고 세부적인 발전방향이 제시함
- 국내외 동향에 입각해서 시기적으로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내에서 우리

나라 산림환경통계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이 필요함

- 목적지향형 산림통계체제 구축과 통계전문인력보강, 통계위원회설립, 산림환경통계지표개발 등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나라 산림자원 모니터링과 통계체계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이 우선 되어야 함

□ 추후 일정

- 제2차 회의
 - 일 자: 2002. 10. 17(금) 14:00
 - 발표자: 이희선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 제: OECD 폐기물 관리현황